

“R&D 예산 삭감 ‘미친 짓’”

이낙연 전 총리,尹 정부 방침에 “비효율이 이유라면 효율화·증액 동시 추진해야
경제성장 이끄는 방법은 혁신... 중요 혁신 국가가 주도 경제·미래 포기하겠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 불 곳이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급한 것은 연구개발(R&D)예산의 증액”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0%나 삭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조사비비는 25%나 깎았다”며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



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 이제 경제 성장의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였다”며 “스티브 잡스가 천재인 것은 맞지만 그의 아이폰·아이패드 제품은 국가가 지원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미국에서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 연구프로젝트사무국”이라며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정 국가를 읽어 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제 진단

권요안 도의원,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마련 토론회 개최
기획생산체계 구축·정책 책임관·속의기구 설치 등 제안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원주·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권 의원은 “전라북도도는 2021년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먹거리위원회 구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전북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올해 연말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이에 권 의원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먹거리 전문가를 비롯해 전라북도도와 도내 14개 시군 먹거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지역 먹거리(원물+가공)의 생산력(조직화+

형식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 종합계획은 먹거리 가치와 철학을 전제로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불분, 지역성 사회경제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김보금 소장은 “인구변화, 기후변화, 농업생산여건 악화, 유통소비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고 전북 먹거리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군 단위 먹거리 지역 인종제 실시, 먹거리 안전성 점검 소비자 모니터링단 확대·운영 등 지역 먹거리 안전성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군 먹거리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군 센터와 연계해서 먹거리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광역단위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먹거리기본조례에 근거해 먹거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도민들로 구성된 먹거리 속의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전북도 먹거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먹거리 정책 방향이 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곰소만·금강하구, 전북어민들의 품으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7일 공포 즉시 시행
민주 이원택 의원, 해수부에 당위성 설득... 현안 해결 이끌어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7일 공포 즉시 전면 해제된다.



민주 이원택 의원, 해수부에 당위성 설득... 현안 해결 이끌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규정을 해수부가 재정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됐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의 불만

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

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간 모든 수산식품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또한, 포획금지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제장 7종을 폐지한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 해제를 위해 애써주신 해수부 및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수산업 현안 해결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증액 및 해수부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끈질기게 성실하게 현안을 해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병철 도의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달 31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은 환경부가 선도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는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인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탈 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SNS 등에 게재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환경부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는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매달 주문 시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리활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 및 재활용품 사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대화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Kunsan City Gas Corporation

세만금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도시가스

축! 전주매일 창간

매월 4일은 우리집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EOCS(Excavation One-Call System)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
(www.eocs.or.kr)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Tel : 1644 - 0001

급기구환기구 개방

배기통 불량시 교체

보일러실문 닫고 사용

동절기엔 전원연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자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2013년 8월부터 안전점검 SMS 사전 안내서비스(수용가의 안전점검 월을 고객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사전에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 ◆ 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은 홈페이지 '고객마당 - 안전점검SMS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장미동) 대표전화 : ☎440-7700 고객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19년 5월 23일부터 ARS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